



KOTRA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

📧 주요 내용

🎯 워싱턴 포커스

- (규제) 美 대법원 「세브런 원칙」 파기 결정에 따른 미국 경제 정책 영향 2
- 향후 미국 에너지, 의료, ESG, 첨단 기술 등 규제 업종에 영향 전망

🌐 경제통상 동향

- (관세)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미 대중 관세 인상 관련 미·중 마찰 5
- (경제) 美 공화당, '美 우선주의 무역·경제' 표방 2024 정책강령 공개 6
- (대중견제) 美 하원의장, 대중투자 제한 패키지 법안 연내 통과 추진 7
- (공급망) 미국, 인공지능(AI) 프로젝트를 통한 핵심 광물 매핑 효율화 추진 8

⚖️ 의회법안 동향

- 지식 재산권 보호법 등 2건 9

🗨️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0

📅 워싱턴 주요일정

7월 9일(화)	•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파월 상원 증언(Fed Chairman Powell testimony to Senate)
7월 10일(수)	• 5월 도매재고(Wholesale inventories)
7월 11일(목)	• 6월 CPI (Consumer price index)
7월 12일(금)	• 6월 생산자가격지수(Producer price index)

(규제) 美 대법원 「셰브론 원칙」 파기 결정에 따른 미국 경제 정책 영향

1. 개 요

□ 연방 대법원 다수의견으로 ‘셰브론 원칙’(Chevron Doctrine) 파기 결정(6.28)

- 이번 판결에 따라 법률 해석 및 집행에 관한 행정부 권한 축소 불가피 전망
 - 셰브론 원칙(Chevron Doctrine)이란, 법률의 문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행정부 주무 기관의 법률 해석과 이행 지침 수립 권한을 폭넓게 존중하는 관례
 - * '84년 ‘Chevron v.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’ 판례에 근거

□ 환경, 금융, 노동, 보건 등 현 정부 핵심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 예상

- 지난 40년 동안 법원의 행정 소송 판결에서 준용됐던 셰브론 원칙 파기 판정은 향후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온 국내외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
 - 현 정부의 기후, 노동환경, 복지, 보건, 기술 등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기업 및 산업 단체 등이 사사건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

2. 판결 주요 내용

□ 사법부가 모호한 법률 조문에 대한 해석 권한을 행정부로부터 회수

-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“법원은 정부 기관이 법률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”라며 결정
 - ‘행정절차법’(Administrative Procedure Act)에 따라 사법부가 특정 법률의 취지와 원칙을 해석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 법률 집행을 견제해야 한다고 밝힘.
 - 마땅히 행정부의 전문성과 견해를 존중하되, 불분명한 법률 조항의 해석과 집행 적절성 판단은 사법부 소관이 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
- 진보 성향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민의로 선출되지 않는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

- 고도의 전문성과 정책 판단이 필요한 규제 법률 해석의 전권을 사법부가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며,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추진에 장애 우려

□ 現 보수 지배적 대법원 구도 반영, 대법관 이념 성향에 따라 6:3 의견 분할

-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 6명이 전원 세브런 원칙 파기에 찬성
-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파기에 반대 의견 표명

〈 대법원 세브런 원칙 파기 판정 결과 〉

세브런 원칙 기각 찬성						다수 의견
	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"세브런 원칙은 법원의 법정 책임을 간과하게 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." • "세브런 원칙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실추하고 행정부의 권한은 동시에 비대화됐다." • "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세브런 원칙이 고안됐을 당시 누구도 그 무적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."
존 로버츠	클라렌스 토마스	사무엘 알리도	닐 고서치	브렛 카바나아	에이비 코니 바넷	
세브런 원칙 기각 반대			소수 의견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"오랜 행정 거버넌스 규칙이 사법부의 과도한 해석의 희생양이 됐다." • "의회가 모호성 없는 완벽한 법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" 			
소나 소더마이어	엘레나 캐이건	케탄지 브라운 잭슨				

[자료] Bloomberg Government

□ 이번 결정은 △법률 해석 △규제 불확실성 △입법부 역할 등 막대한 영향 전망

- (법률 해석) 그간 법원은 특정 법률 조문이 불분명(ambiguous)하다고 인정 되면, 소관 정부 기관 해석을 존중(deference)하여 판결해 왔으나,
 -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이 행정 소송에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해석하여 정부 행정 집행의 합리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됨.
- (규제 불확실성) 향후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정 규제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.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에너지, 환경, 보건 정책에 제동 불가피
- (입법부 역할) 의회는 법안 수립 시 현실적인 이유(전문성 부족, 여야 합의 실패)로 세세한 규정은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으나,
 - 세브런 폐기로 입법 시 세부 규정을 성문화해야 하는 의회 부담 가중(예산, 전문 인력 확충 등), 현 정치 양극화 속 의회 입법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우려 존재

3. 미국 정책에 미칠 영향

- (에너지) 바이든 정부가 역점 추진해 온 에너지 전환,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차질
 - 환경보호청(EPA)이 지난 4월 공시한 '석탄 및 가스 발전소의 탄소 저감 규정'*은 업계가 제기한 소송으로 좌초할 가능성
 - * 신규 화석연료 발전 시설의 탄소 배출 한도 수립 및 탄소 포집저장 기술 사용 의무 등 규정
 - 그 밖에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및 송전망 고도화 의무 등 규제 후퇴 전망
- (의료) 오바마케어,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제도, 기타 공공 의료 진흥책, FDA 신약 심사 제도 등 관련 행정 소송 예상
- (ESG) 연기금 투자 시 ESG 고려 의무화, SEC의 상장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규제 제동 가능성 존재
- (AI) 현재 의회가 진행하는 인공지능(AI) 규제 법률 수립에 장애 발생. 그 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기술 규제 정책에 난항 예상
- (기타) 인종성별 등 사회적 다양성, 학자금 대출 탕감, 금융기관 수수료 제한, 초과근무 수당 규정 등 국내 정책 추진에도 차질 발생 예상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

▪ 자료원 | 폴리τικο([6.28](#)), Arnold&Porter([7.1](#)), 워싱턴포스트([7.5](#)), 블룸버그([7.8](#))

(관세)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미 대중 관세 인상 관련 미·중 마찰

- 중국은 WTO 상품무역이사회(Goods Council) 회의(7.2~3)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추가 인상 조치가 국제무역규칙을 위반한다고 주장
 -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5월에 발표한 추가 관세*가 WTO 규칙에 합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의 사례라고 언급
 - * 바이든 행정부는 5.14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 관세 최대 100% 발표
 - 중국은 '20년 9월 WTO가 판정한 미 대중 301조 관세의 무역규칙 위반을 언급했으나 새로운 분쟁 해결 제소를 진행할지는 밝히지 않음
- 미국은 동 조치를 옹호하며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문제의 미해결을 지적
 - 미국은 중국이 외국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저지른 사이버 침입과 사이버 절도 등을 비난
 - 양국은 미국의 중국 제조 선박 입학세 부과에도 의견 충돌을 보였고, 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11월 미 대선 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정수나
▪ 자료원	폴리티코(7.3)

(경제) 美 공화당, '美 우선주의 무역·경제' 표방 2024 정책강령 공개

- (개요)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(RNC), 차주 전당대회(7.15~18)에 앞서 정책강령 공개
 - 경제, 산업, 통상, 인플레이션, 물가, 이민, 외교, 국방 및 대중국 정책 등에 대한 20개 의제를 담은 '24년 미 공화당 정책강령(GOP Platform) 발표(7.8)
 - 현지 언론은 '24년 정책강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대거 반영하고 있다고 보도
- (상세) 미 우선주의(Make America Great Again)를 표방한 경제·무역정책 제시
 - (경제정책) △인플레이션 종료 △대규모 감세와 팁 면세 △저비용 에너지(석유, 천연가스, 석탄) 생산 확대 및 규제 종식 △에너지 비용 절감 △비트코인 채굴 권리 옹호 및 거래 자유 보장 △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(AI) 행정명령 폐지 △미 우주산업 개발 확대 등
 - (무역정책) △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△불필요한 규제 철폐 △외국산 제품 기본 관세 유지 △트럼프 상호무역법(Trump Reciprocal Trade Act) 통과 및 수입품 관세 대폭 인상 △중국 최혜국 대우 박탈 △미국내 핵심 공급망 강화 △바이아메리칸(Buy American) 정책 강화 등
 - (기타) △이민법 강화 △국경 정책 복원 및 국경장벽 완공 △국방 및 동맹 강화 △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 비용 삭감 등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문현주

▪ 자료원 | 폴리τικο(7.9), 미 공화당 정책강령(7.8)

(대중견제) 美 하원의장, 대중투자 제한 패키지 법안 연내 통과 추진

- (개요)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, 올해 말까지 중국 견제 법안 상당 부분 서명 목표
 - 허드슨 연구소 정책 연설에서 “현재 중국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”, “차기 행정부가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법안에 대해 투표할 것” 발언
- (상세) 법안 패키지에 대중 투자 규제, 301조 미소기준 특혜 철회 등 포함 전망
 - 이번 법안에는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 제한 조치와 러시아·이란 대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 군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재 패키지 등이 포함될 전망
 - 지난 4월 하원 세입위에서 승인된 ‘중국 미소기준 남용 방지법’을 바탕으로 301조 관세의 적용을 받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산 수입 선적 대상으로 면제 자격 중지 추진
 - 바이오시큐어법(BIOSECURE Act)을 통해 중국 등 적대국과 관계있는 생명공학 기업의 연방 계약 금지 추진, 선박 건조 등 해상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 중요성 강조

-
- 작성자 | 워싱턴 무역관 김준희
 - 자료원 | 폴리τικο([7.8](#), [7.9](#)), 인사이드([7.8](#))

(공급망) 미국, 인공지능(AI) 프로젝트를 통한 핵심 광물 매핑 효율화 추진

- (개요) 미 행정부, 핵심 광물 자원 발굴 효율화를 위한 AI 기술 도입
 - 미국 국방부, 에너지부, 내무부 등 주요 행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핵심 광물 자원* 매핑 프로젝트를 착수하여, 광물 탐사 및 추출의 효율성 향상 및 가속화 추진
 - * 21년 인프라 법에 따라, 미 지질조사국(USGS)은 향후 10년간 주요 광물 프로그램 지원 예정
- (상세) AI 기술을 활용한 자원 안보 강화, 환경 보호와 공급망 유지 균형 모색
 - 코발트, 리튬, 니켈, 흑연 등 주요 광물이 인권 및 환경 문제가 있는 국가에서 수입됨에 따라, 미국 내 친환경적인 공급 생태계 조성 및 수입 광물 의존도 경감 목표 제시
 - 동 프로젝트를 통해 (1) AI 활용 광물 개발 가속화. (2) 산업계-정부 간 AI 협력 강화, (3) 환경 보호, (4)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 미국의 자원 안보 강화 역할 수행 기대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정연호
▪ 자료원	블룸버그(7.8)

미국 의회법안 동향

구분 (현행일)	법안 (발의일)	대표 발의자	법안
지식재산권 보호법 (7.2)	H.R.8924 (하) (7.02)	Young Kim (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4년 미국 혁신 및 개발 보호법(Protecting American Innovation and Development Act of 2024) : 허가 없이 신흥기술 관련 지재권을 사용하는 적대국 단체를 상무부가 식별·보고하도록 명령
재무부 청정 자동차 세액 공제 관련 (7.2)	H.J.Res179 공동 결의안 (하) (7.02)	Gary Palmer (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무부가 수립한 청정 자동차 세액공제(25E, 30D) 지침을 불승인하는 결의안(세액공제 이전,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, 우려 대상국 기관 등 규칙 등)

* 미국 동부 시간 7월 9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How Biden's Inner Circle Worked to Keep Signs of Aging Under Wraps (바이든의 고령화 징후...백악관 참모들의 은폐 작전)</p> <p>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은 바이든의 고령화 징후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면담, 인터뷰 등은 모두 대본에 따라 진행시키는 등 대통령 일정을 밀착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져</p>
The Washington Post	<p>Trump's VP choice may be down to 3. Here's what each brings. (트럼프 부통령 후보 3인에 대한 분석)</p> <p>트럼프의 러닝메이트 지명은 7월 15일 전 이루어질 예정으로, 플로리다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, 오하이오주 J.D. 밴스 상원의원, 노스다코다 더그 버검 주지사가 최종후보로 논의 중</p>
The New York Times	<p>What to Watch for at the NATO Summit This Week (NATO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?)</p> <p>워싱턴에서는 NATO 정상회담이 3일간 개최되고 있으며, 러시아에 NATO 회원국의 단결과 힘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바이든의 고령화로 인한 대통령직 수행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는 분석</p>
CNN	<p>Why McDonald's killed this menu item (맥도날드 메뉴판에서 사라진 메뉴)</p> <p>맥도날드는 한때 샐러드 판매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으나, 샐러드가 식중독의 원인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 메뉴 축소가 필요해짐에 따라 2020년 이후로 샐러드는 메뉴판에서 사라져</p>
USA Today	<p>It is way too hot. 160 million under alert as heat breaks records and a bridge (더워도 너무 더운 올 여름)</p> <p>1억 6천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폭염 경보 하에 놓인 가운데, 휴스턴 주민 200만명은 정전을 겪고 있으며 라스베이가스에서는 뜨거운 도로에 의한 화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</p>

* 미국 동부시간 7월 9일 16시 기준

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주별 투자진출 정보를 한 눈에, 미국 투자진출 WEB가이드!

주별 경제 현황부터	주별 신청가능한 인센티브까지!	바로가기
		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4-19	미국 IRA 첨단 제조업 세액공제제도(45X) 상세 내용과 시사점	2024.06월
US24-18	최근 중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(FDI) 동향 변화	2024.06월
US24-17	美 행정부, 자발적 탄소 시장(VCM) 촉진을 위한 원칙 발표	2024.06월
US24-16	미국 상무부,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판정 공개	2024.05월
US24-15	美 상원, 인공지능(AI) 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보고서 발표	2024.05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사-18 (2024.5.13.)	 <p>미 육군협회장이 들려주는 미국 방산시장 현황&전망</p>	
코인사-17 (2024.4.4)	 <p>한미 FTA 주역에게 들어보는 글로벌 통상 전망</p>	

문의	이메일	전화
	seogil.chang@kotra.or.kr jwshim@kotra.or.kr	+1) 202-857-7919